



# 濁流清論

제34호 2014년 10월 29일(수)

발행인 : 김호섭 / 편집 : 편집위원회

<알려드립니다>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접수하실 원고를 교수회 이메일 (juok@ajou.ac.kr)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위의 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목 차 >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대학평가 단상	1
특집: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4
특집: 시장, 국가 그리고 대학-대학평가의 빛과 그림자	5
특집: 대학평가 논란을 계기로 생각하는 대학의 정체성과 책무성	7
특집: 다시 생각하는 대학평가	10
소통과 담론: 평가, 실어함에서 모호함까지	13
교수들의 건강칼럼: 인간의 숙명—허려 디스크 트러블	15

##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 대학 평가 단상

행정학과 강명구

얼굴 밝고 마음 맑은 사람들의 부탁을 거둬 거절할 용기가 부족하여 맑은 칼럼이기에 이 글은 사전연구나 자료 추적 없이 그야말로 상식의 수준에서 정리한 개인적 소견임을 미리 밝히며 시작한다. 짧은 글이니 세세한 분석보다는 새의 눈으로 대학평가제도의 속성을 큰 틀에서 조감(鳥瞰)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칠 것이다. 욕심을 좀 부리자면 이 글이 학내에서 대학평가에 대한 진지한 논쟁과 성찰의 시발점으로 작동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동체의 공적인 의사결정에 있어 어떠한 소란도 무관심의 침묵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구미 각국에 비하여 대학의 연륜이 박약한 우리네 대학들은 아무리 상아탑 운운하며 진리추구를 통한 학문의 자율성을 추구하였다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국가 통제에 복속되어왔다. 정부의 규제위주 행정 지시를 (감히!) 물리치기에는 너무도 허약하였고 재정지원을 멀리하기에는 너무도 등록금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나 경제가 급성장하여 재벌을 중심으로 한 시장권력이 국가권력에 버금가는 (아니면 상회하는)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시장권력이 대학에 가하는 영향력은 (어떤 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식민화’ 수준에 이르렀다. 대학의 취업관련 담당자가 교과목의 운영과 학점산정에까지 혼수를 두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다. 일개 신문사에 지나지 않지만 중앙일보의 대학평가에 우리가 주의하는 까닭이다. 이십여 년의 대학평가 사업을 통하여 중앙일보는 시장권력의 침범으로서 전위부대 역할을 톡톡히 하여왔다.

더욱이나 우려되는 것은 정부의 태도다. 한 사회의 기본가치를 생산하고 이를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로 넘겨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교육은 분명 공유재화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굳이 유럽의 경우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많은 수의 국립대학과 정부 보조금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시장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추를 맞추기 보다는 오히려 암묵적으로 그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가 주류를 이루어 온 점을 감안한다면 양자가 ‘국가 경쟁력 강화’ 깃발아래 경제성장을 위한 대학의 순치(順治)라는 이익을 공유하려는 시도가 전혀 낮설지 않다. 대학평의회 활동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체험한 개정 사학법의 민낯은 화려한 미사여구와 그럴듯한 형식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학 사유화(私有化)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었다.

그렇다면 20 여 년의 대학평가가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가? 가장 큰 적폐는 거의 망국적 수준에 이른 대학 서열화를 통한 학벌사회의 고착화이다. 졸업하여도 제대로 된 직장 잡기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대학을 가지 않으면 잉여인간이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한 단계라도 높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인간대접 못 받을 것 같아 어릴 적부터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라는 헛소리를 되뇌며 강남가고 하다못해 동네학원이라도 보낸다. 폐지 주위 생계꾸리는 독거노인이 손주 학원비

걱정한다면 이 나라는 교육천국이 아니라 교육망국이다. 백보 천보 양보하여 이렇게 해서라도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현실은 언감생심이다. 부모 소득과 자녀 학벌은 단언컨대 상관관계가 드높다.

중앙일보 평가가 대학간 경쟁을 통해 한국의 대학교육 질을 끌어올린다면 모르겠지만 이 또한 어불성설이다. 중앙일보 평가의 또 다른 확실한 결과는 대학 서열의 양극화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양극화 되고, 수도권의 고만고만한 대학들 중(물론 나의 아주대도 이 부류에 속한다.) 일부만 생색내기로 서열상승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하향 조정되어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가져온 그리고 가져올 참혹한 현실이다. 문제는 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면관계상 이러한 평가가 가져올 학문세계의 황폐화를 상술하기는 어렵지만 이른바 대학 내의 구조조정을 통한 문사철(文史哲)의 괴멸과 취업 및 실용학문 위주의 득세는 장기적 안목에서 대학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영어강의가 그렇고 부실논문 양산이 그렇고 외국인 학생 유치에 그렇고 민자 기숙사가 그렇고 기타 등등이 그렇다.

사정이 이렇진대 교육소비자로서 그야말로 을(乙)의 입장에 서있는 당사자들(특히 힘없는 저소득층)은 시장권력이 정해준 “SKY서성한. . .” 등의 랭킹을 기준으로 입시전략을 택하지 않을 수 없고 공룡수준에 이른 사교육은 이를 부추긴다. 중앙일보는 나름 억울하다고 할 것이다. 공력과

노력을 들여 객관적 평가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대학을 평가했으니 오히려 교육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시장 정보를 준 공로가 있지 않느냐는 항변이다. 누구 말을 패러디하자면 ‘비정상적 정상화’ 아니냐는 말이다. 노고는 인정하지만 단언컨대 중앙일보는 왼편으로 신호 넣고 천천히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며 오른쪽으로 방향 틀었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한 꺼풀 벗기면 ‘조중동’을 ‘중조동’으로 바꾸고픈 자사(自社)이익이 도사리고 있을 게다. 그리고 그 연장에서 특정 이해 관련대학이 이른바 SKY에 비하여 종합순위가 높아졌다고 의심하면 지나친 일일까?

그렇다면 어찌해야 한다는 말인가? 나는 아주 희망이 없다고는 보지 않지만 매우 이기기 힘든 게임을 대학인들이 하고 있다는 비판적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설파한 이론에 따르자면 소수는 단결하기 쉽지만 다수는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집단행동이 어렵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자면 대학들은 학문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집합적 행동보다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택함으로써 한일간신문의 분할지배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평가를 바라보는 대학인들의 시선은 매우 양면적이다. 자신이 속한 대학의 순위가 올라가면 대학평가의 문제점을 익히 알면서도 내심 흐뭇해한다. 반면에 순위가 지난해에 비하여 처지게 되면 평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재벌언론을 호되게 비판한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이런

이중적 행태는 재벌언론의 왜곡과 횡포를 무시하기에는 힘이 약하고, 그렇다고 따라하자니 힘에 부치는 이 ‘고만고만한’ 대학들은 (물론 아주대도 이 부류에 속한다.)에서 특히 강하다. 우리는 이렇듯 재벌언론의 암묵적 분할지배 전략에 희생되는 학문공동체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오해 없기 바란다. 나의 주장은 평가무용론이 아니다. 우리네 대학과 같이 기득권에 안주해온 집단들은 외려 더욱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문제는 왜 그런 평가를 학문공동체가 마련하지 못하고 국가나 시장권력이 그들의 잣대로 마음대로 재단하느냐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탄 정치학자(!)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견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에 따르자면 일정한 제도적 조건들만 갖추어진다면 무임승차로 파괴되기 쉬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시장이나 국가 말고 공동체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녀의 견해를 굳이 들이대지 않더라도 문제해결의 가늠다란 희망은 우리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 진정성이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 조용한 교수들을 대신하여 대학생들이 중앙일보 대학평가 거부운동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세월호 아이들이 목숨 바쳐 이 사회의 적폐를 낚낚이 고발하듯 말이다. 우선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희망이 보일 것이다.



##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획처장 김민구

### 1.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개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구조개혁의 계획을 요약하면 향후 고등교육 수급 전망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2023학년도까지 3단계의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총 16만 명 감축하는 것이다.

<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안) >

평가주기	1주기('14-'16)	2주기('17-'19)	3주기('20-'22)
감축 목표량	4만 명	5만 명	7만 명
감축시기	'15-'17 학년도	'18-'20 학년도	'21-'23 학년도

감축방안은 구조조정 기간('14~'22)을 3년씩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병행한 절대평가를 통하여 모든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시키는 것이다. 등급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뿐 아니라,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2회 연속으로 '매우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0일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의견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 2.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주요 항목

교육부가 현재까지 마련한 안에 의하면, 10개 영역에 23개의 항목, 36개의 지표로 되어 있으며, 특성화 영역은 별도로 되어 있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 주요 항목>

평가영역	평가항목(지표수)
1.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선발	중장기발전계획(3) / 정원조정 및 학부(과)조정(1)/학생선발(1)
2.교원 및 직원	교원확보(2) / 교수지원(teaching)(1) / 직원(1)
3.교육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교육기본시설(3) / 기타지원시설(1)
4.재정/운영시스템	세입(1) / 세출(1) / 대학운영(1)
5.교육과정	교육과정편성 및 강의개설(2) / 교양 교육과정(2) / 비교과 교육과정(1)
6.학사관리	수업관리의 엄정성(1) / 성적관리의 엄정성(2)
7.학생지원	학습지원(3) / 장학지원(1) / 취창업지원(1)
8.교육성과	교육성과(3)
9.교육만족도	교육만족도(1)
10.사회기여	사회기여(1)
*특성화	대학특성화운영현황(2)

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은 대부분 작년에 시행했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와 유사하지만, 부분적으로 정성적인 평가가 추가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도 내용을 보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도 많으며, 상대평가 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지표에 대한 가중치 언급도 없다.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안은 올해 말까지 완성하여 공청회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가시기는 아직은 미정이지만, 빠르면 내년 1월, 늦으면 내년 5월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교육부 평가에 대한 우리 학교의 대응 전략 및 방안

본교에서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사전준비 안을 만들어 준비 중에 있다. 자체평가 조직으로 대학원장, 학처장을 중심으로 하는 『자체진단평가기획위원』, 각 영역에 전문성을 갖춘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자체진단평가위원회』 및 각 분야 실무 직원으로 구성되는 『자체진단 평가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위한 학교의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우리 대학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준비 일정>

주요 내용	일 정
대학구조개혁 공지 및 준비 안내 공문 발송	10월 말
대학구조개혁 부족사항 기획처 자체 점검	현재 진행 중
관련 지표 해당부서 방문 설명	11월 초
각 부서 1차 점검 내용 보고	11월 중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10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범대학 차원의 노력과 구성원 전체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시장, 국가, 그리고 대학 — 대학평가의 빛과 그림자

사학과 김태승

오늘날 대학은 범람하는 평가의 늪에 빠져있다. 대학교육의 관리담당 관청인 교육부를 비롯하여 각종 언론사의 평가, 그리고 대학이 스스로 만들어낸 각종의 평가체제는 끊임없이 대학체제를 평가대비체제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평가대비체제는 모든 대학의 활동과 작동체제를 ‘지표화 된 숫자’로 환원시킴으로써 대학교육을

화석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평가거부운동과 같은 저항도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사실 수능성적이 한 인간의 평생을 거의 규정하는 한국사회에서 대학평가는 기본적으로 입시전문기관들이 만들어내는 ‘족보’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1994년에 시작되어 가장 권위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언론 기관의 평가를 의미있게

만들었던 것은 초기에는 아주대학이었고, 최근에는 성균관대학 등이었다. 이 대학들이 ‘수능질서’에 변동을 가져왔던 거의 희귀한 사례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만이 아니라 언론사의 대학평가는 더욱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세우면서 외국 기관의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수행하는 평가도 등장하고 있다.

왜 이렇게 대학평가가 그 자체의 시장을 출현시키게 되었을까. 사실 거기에는 대학자체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0~60년대를 거치면서 대학은 ‘우골탑’이라는 우울한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많은 대학이 출현하였고, 이 시기에 증가했던 사립대학들은 교육기관으로 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사유물로 기능하는 측면이 강했으므로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확대되어갔던 것이다.

이처럼 대학이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대응책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졸업정원제, 대학설립의 자유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의 본질적 측면 보다는 양적팽창에 주력하던 대학들은,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상당수의 대학에서 족벌체제적 경영과 폐쇄적 운영이 지속됨으로써 자기 혁신을 위한 노력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도 그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개별적 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위협받게 되었던

것이다. 학부모들의 관점에서 보면 언론사들이나 관주도의 대학평가는 그러한 대학의 혁신노력 부재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으므로 환영받을 수 있었고, 대학은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에 대한 평가가 단기적으로 지속되고, 그 과정에서 지표에 의한 대학경영이 강제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교육부 평가의 경우 대교협 주관의 평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비지원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거나 입시시장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들은 숫자로 환원 가능한 지표관리에 예산을 집중하게 되었고, 비지표영역은 관심에서 소외되게 되었다. 심지어 인성교육과 같은 중요한 교육주체조차 강좌 수, 프로그램 수 등으로 환원되게 되었다. 게다가 매년 진행되는 다양한 평가에 대비하여 지표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므로 대학경영과 예산관리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점차 위협받게 되었다. 심지어는 특성화라는 이름의 비특성화 현상도 널리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평가대비와 국비 획득을 위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학들은 다른 대학들의 사례를 참고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표현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평가라는 단일의 기준에 대한 대학의 대응으로 귀결되었으므로, 결국 대학들의 창의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달라지는 국비사업과 그에 따른 평가체제는 자의적으로 해석된 시장/정치 논리에 대학을 종속시키게 만들었던 것이다.

언론사들의 평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언론사들의

평가에서 제시된 지표항목들은 사실상 대학의 가치를 규정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특히 국제화와 관련된 지표들의 경우 한국 대학의 정체성에 위협이 될 정도였다. 영어강좌비율, 외국인 교수 비율, 해외파견 교환학생 비율 등으로 대학의 국제화를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각 대학에서는 연구와 교육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영어강의 지표관리를 위한 예산 등 대학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의 과도한 예산 투자가 진행되게 되었다. 더구나 언론사의 대학평가는 그 결과가 매년 순위를 매겨 발표되었으므로 장기적 전망 하에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평가결과에 따른 교내외의 압력으로 인하여 대학의 행정가들은 오직 지표개선에만 몰입하는 상황이 대학에서 전개되게 되었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대학평가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고,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대학사회의 책임도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의 대학평가는 교육의 본래적 측면보다는 시장에 대한 대학의 지표화된 적응력 평가에 주안점을 둬으로써 사실상 대학교육을 시장에 종속시키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노력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다.

오랜 기간 동안 대학은 시장, 국가 등으로부터 비교적 자율적 영역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인류의 자산이 대학교육 현장을 통해 토론되고 외부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체제 하에서 그것이 앞으로 가능할까. 대학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현재의 평가체제 하에서 가능할 것인가? 누구도 그렇다고 답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소모적인 평가체제에서 벗어나 대학이 꿈을 꾸고, 그러한 꿈에의 도전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기회를 찾기 위한 대학 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 대학평가 논란을 계기로 생각하는 대학의 정체성과 책무성

기초교육대학 송 하 석

최근 주요 일간지에서 하는 대학평가에 대해서 몇몇 대학의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거부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고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이 시작되면서 대학평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대학평가란 대학에게 부여된 자율권에 대해서 요구되는 책무성을 다하는지 검증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평가는 그 자체로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대학의 책무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인지, 또 대학평가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주체가 누구인지 등이 문제일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사 중심의 대학평가와 관 주도의 대학평가는 평가의 목적과 주체라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대학평가가 대학의 책무성에 대한 검증이라면, 대학의 책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의 책무성이란 교육활동과 그에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 및 교육결과에 대하여 정당성을 설명할 의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학의 책무성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은 몇 가지 점에서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980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고교 졸업자의 10% 정도가 대학에 진학을 하였고,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약 15%,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대략 80% 정도가 대학 진학을 하고 있다. 엘리트 교육과 대중교육을 구분하는 기준은 보통 취학률에서 찾는다. 사회마다 그 비율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5% 미만일 때 엘리트 교육, 그리고 50% 정도까지를 대중교육,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보통교육(보편화 교육)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학은 이제 더 이상 엘리트 전문인을 육성하는 교육일 수 없고, 오늘날 대학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우월성의 지표가 아니라 평균성, 일반성의 지표일 뿐이다. 대학의 교육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현재의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16세기 초 근대 서양의 대학이 겪었던 위기와 비슷한 점이 있다. 12~13세기에 설립된 중세의 대학이 16세기부터 위기에 부딪혀 쇠락의 길을 걷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인쇄술의 발달이었다. 근대 인쇄술의 발달은 지식의 대중화를 촉진하여 학문 공동체로서 대학의 가치를 위협했다. 근대 초 서양

학문의 지평은 대학을 통해서 확대, 발전된 것이 아니었다. 이는 데카르트, 파스칼, 로크,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루소 등 16~17세기의 위대한 학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대학교수가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하면 분명해진다. 그렇게 쇠락의 길을 걷던 대학이 19세기에 제2의 탄생을 하게 되는데, 고양되기 시작한 내셔널리즘이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근대 대학의 부흥을 주도했던 독일(당시 프로이센)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국민적 위기의식이 생겨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대학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21세기를 특징짓는 두 개의 단어는 아마 디지털 혁명과 글로벌화(세계화)와 일 것이다. 디지털 혁명은 현대의 대학이 더 이상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교육을 담당하는 유일한 곳이라는 믿음이 허망함을 깨우쳐 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세의 대학을 위협했던 16세기의 인쇄술의 발달에 비견할 수 있다. 또 20세기 말부터 진행된 급속한 세계화는 신자유주의라는 미명하에 모든 가치를 시장의 가치로 환원하고 근대의 합리적 이성을 시장에서의 효율성과 경쟁력으로 치환하면서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고교 졸업자의 감소라는 특수성까지 겹쳐 오늘날의 우리나라 대학의 위기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상황은 중세의 대학이 쇠락하고 근대의 대학이 탄생할 무렵과 정치, 문화사적 위기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무엇이어서 하는가라는 정체성의 문제와, 그에 따른 대학의 책무성은 누구에 대한 어떤 책무성이어야 하는가는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중세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등장한 근대 대학의 이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세 대학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근간으로 형성되었다면 근대 대학은 칸트의 철학이 그 토대가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기독교 신학의 내적 조화를 고민했던 중세의 스콜라철학자들과 달리, 칸트는 사회적 유용성을 목적으로 하는 상급학부(신학, 의학, 법학부)와 이성의 자유를 토대로 하는 하급학부(Liberal Arts)를 구별하였다. ‘리버럴 아트’라는 말은 출발부터 ‘노예적인’과 대립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것은 바로 어떤 유용성이나 종교적 초월성에도 봉사하지 않는 그 자체로 충족적인 학문을 의미하였다. 칸트는 상급학부에서 추구하는 유용성과 하급학부에서 추구하는 자유로운 이성 사이의 변증법적 대립이 바로 대학의 활력의 원천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학문은 자신의 영역에서의 진리를 탐구하지만, 철학적 이성은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것, 그 자체에 대한 메타(meta)적 차원의 탐구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타적 탐구를 통해서 대학은 자기반성의 계기를 구조적으로 내면화하고 이것이 바로 대학을 직업학교와 구별하는 중요한 점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현대 철학자 데리다도 <조건없는 대학>이라는 책에서 “이러저러한 경제적인 합목적성 혹은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모든 연구기관[기업]으로부터 대학을 엄밀한 의미에서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조건없는” 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우리 대학의 목표는 교육 수요자들에게 리버럴 아트 교육을 통해서 자기성찰적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몽상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교육 수요자들에게 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러한 역량이 적절한 전공지식과 결합될 때 취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대학평가를 비난하는 대표적인 주장 중 하나가 언론사의 대학평가는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고, 이것만으로도 언론사의 대학평가에 대해서 반대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학벌주의를 거부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 학교와 학생을 평가할 것인가? 흔히 내세우는 대안이 능력주의다. 학벌에 상관없이 한 개인이 지닌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능력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하고 나아가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의 능력자들만 우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미 부(富)의 고착화가 이루어진 우리 사회는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아니다. 부의 격차가 능력의 격차로 이어지고, 부의 대물림처럼 능력의 대물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제 대학교육을 신분상승의 도구로 여기던 시각을 벗어나고 공공성과 보편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대학 교육의 목적을 취업이라고 명시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취업은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좋은 교육의 결과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부수적 효과이어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적 가치에서 찾아져야 한다. 대학교육 수요자에게 민주사회의 성숙한 평균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구비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 대학교육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책무성을 요구할 주체는 평가를 구실로 구조조정을 강요하려는 관(官)이어서도, 노동자의 교육비용을 공교육에 전가해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투자비용을 국민 전체에 부담시키면서도 대학교육의 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기업이어서도 안 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평가는 대학의 정체성과 책무성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즉각적이고 심지어 천박하기까지 한 기준을 양화하여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목적을 상실하고 부작용만 낳고 있다. 대학이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 다시 생각하는 대학평가

교육대학원 김 주 후

언제부터인가 대학평가라는 단어가 언론보도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몇몇 언론사 대학평가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대학관계자는 물론 학부모들까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리고 각 대학들은 그 결과에 따른 희비가 갈림은 물론 다음 해 평가준비 내지는 소위 지표관리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에 열을 올린다. 대학평가는 이제 몇몇 대학 관련자들만이 아니라 대학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보는 인기가요 순위처럼 되어 버린 것 같다.

물론, 대학평가는 언론사에서 진행하는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평가도 있고 각 학문분야별로 진행되는 인증평가도 있다. 전자가 대학들 중 소위 부실경영을 하고 있는 대학들을 가려내고

퇴출시키는 것에 주목한다면 후자는 각 학문별 특성을 감안하여 질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평가는 이제 피하기 어려운 수준의 일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반복적인 업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대학평가는 개인에 대한 평가와 달리 말 그대로 ‘대학’을 평가의 단위로 설정하고 진행한다. 즉, 평가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되는 경우인데 바로 이 부분이 여전히 낯설게 다가온다. 그도 그럴 것이 각 대학 안에는 매우 이질적이라 할 수 있는 많은 단과대학과 학과들 그리고 그에 속한 교수 및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인 성격이나 교육목표 또 졸업한 후의 진로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학과들을

하나의 평가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취를 종합하여 하나의 등수로 매기기도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대학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여러 해 전 미국에서 대학평가 업무를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신 배 영 교수님을 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배 교수님은 이미 작고한 미국 미조리 대학교(켄사스시티)의 교육대학장이셨는데 대학평가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진행하셨던 분이다. 특히, 대학 인증평가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고 국내 대학평가 관련자들에 대한 자문역할도 하셨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대학평가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코멘트도 주셨는데 그분의 포인트는 아주 간단했다: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평가방식을 따라하지 말라”.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 설명의 핵심이었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는 대학평가는 미국에서 개발되고 사용되어온 평가방식을 모방하고 있다. 그래서 교수 1인당 논문 수가 어떻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어떻고 하는 식의 수많은 지표가 활용된다.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이용하여 점수를 계산하여 합하면 그 점수가 각 대학의 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가끔 정성평가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평가전문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아 국내의 경우 그동안 활용이 제한되어 왔다. 정성평가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평가전문가를 길러내는 시스템부터 갖추어야 하는데 여전히 지표놀음에 빠져 있어서 그럴

여유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양적지표든 정성지표든 다들 한계가 있다 보니 배 교수님의 조언처럼 정말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와중에 대학 평가와 관련해서 아주 신선한 소식 하나를 전해 들었다. 여러 해 전에 이태리에서 유학한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인문대학에 한정된 부분이기도 하나 자신이 유학한 그 대학의 학장은 미국식 교수평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기 대학 역사 천여 년에서 역사적인 업적을 남긴 교수들의 걸작은 대개 교수직 말년이나 사후에 나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는 미국식 교수업적평가라는 것은 적어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그 대학이 교수평가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자기 대학 나름의 평가 시스템이 있으니 굳이 그런 양적지표를 활용한 평가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영미식 대학평가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일단 우리 문화와 맞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우리식의 평가를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뜻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우리가 영미식 대학평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국식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평가만 열심히 할뿐 평가결과에 따라 개인에 대한 보상이나 승진 나아가 학과의 존폐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즉, 평가는 영미식 틀을 따라 하면서 결과활용은 여전히 전통적인

연공서열식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하려면 철저하게 하든지 아니면 독자적인 평가모델을 만들든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평가를 계속하고 있다는 판단은 그동안 진행된 평가과정을 살펴보면 더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교수 1인당 논문수를 평가의 주요 지표로 사용하다 보니 논문 출판 수는 지난 십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그뿐이 아니라 소위 학진등재지라는 것에 올라간 학술지의 수 또한 크게 늘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학술지 선정이 주로 양적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다보니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다만, 등재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질관리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대학은 오래전부터 자유로운 학문활동과 자율적인 운영에 대한 상징처럼 여겨졌다. 특히, 정치적인 압력이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연구활동에 기초해서 각 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학위를 수여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도 하기는 하지만 역시 기본은 자유로운 학문연구와 가치 있는 지식 창출이 주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만들어진 산출물을 바탕으로 후학들과 만나 서로 공유하고 가르치는 역할 또한 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대학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또 자율적인 운영이 전제되는 조직이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외부인이 만들어 놓은 지표를 가지고 계속 질관리를 해야만 하는 조직이라면 더 이상 대학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야 할지 의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알던 고전적인 의미의 대학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고 일종의 변형된 의미의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솔직히 “이미 그렇게 된지 오래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들기는 한다.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학문연구 어찌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난 대학모델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 그리고 주로 양적지표를 활용한 평가는 바로 그런 기업식 대학을 평가하는 모델이라는 생각도 해 본다.

이런 맥락에서 지표관리식의 대학평가가 과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인가를 묻는다면 NO!라는 대답을 하게 된다. 그런 식의 평가가 일부 대학의 질관리를 위해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 나름의 질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는 지금부터 10년이 지나도 그 지표타령을 하면서 영미권 대학을 쫓아가기에 급급할 것이다. 특히, 그 지표에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고등교육의 질을 논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평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오래 전 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이 적어도 200년 이상 시행했던 과거제도를 떠올려 본다. 과거제도의 시행과정이나 시험내용을 살펴보면 우수한 예비관료를 공정하게 뽑는다는 취지하에 나름대로 타당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 젊은이들은 과거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공부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무시했다. 결국 진취적이고 새로운 호기심을 자아내는 영역이 아니라 과거 누군가가 적어놓은 유교경전에 매달리다가 네 나라 모두 서구열강에 먹히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현상이 대학평가 상황에서도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지표에 질관리를 맞추다 보니 나름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같다. 그러나 그 결과 지표에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몸부림을 치다보니 대학은 점점 획일화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표는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오죽하면 이런 지표관리에 이골이 난 미국의 대학 총장들부터 줄세우기식 평가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 엉뚱한 지표를 제안해 본다. “교수, 학생, 직원이 서로 인사 잘하는 정도” 인데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지표이기는 하다. 물론 이것을 평가하기 쉽지 않고 또 대학들끼리 비교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런 지표에 초점을 두고 대학을 운영해 간다면 분명 질 높은 대학교육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단순히 교수, 학생, 직원 사이의 관계가 좋다는 정도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존경 그리고 공동의 프라이드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가 방문한 국내 외의 우수한 대학들을 살펴보면

대학구성원들이 서로 인사를 잘한다. 실제 평가에 사용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대학평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 보는 차원에서 이 지표를 제안해 본다.

이제 대학평가의 의미와 기능을 다시 생각하면서 새로운 방향감각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은 대학평가가 지향하는 바가 집단의 역량이나 정당성을 그 나름의 성취를 통해 증명(prove) 하는 것이 아니라 향상(improve)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가 혼동되고 나아가 그 의미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평가는 다들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 될 뿐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학평가는 뭔가를 자꾸 증명해야만 할 것 같은 평가처럼 보이고 무엇을 향상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대학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 모든 논의의 과정이 한국의 대학 구성원들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시작하는 토착화된 시스템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평가, 싫어함에서 모호함까지**  
 전자공학과    김 상 배

채점을 하다 지루함과 지겨움에 눈을 감는다. 배우는 이들에게 시험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는 있겠지만 반가움의 대상은 결코 아닐 터, 이는 가르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듯싶다. 이렇게 평가는 가르치는 이들에게나 배우는 이들 모두에게 싫어함의 대상이다. 가르치는 이들도 수업평가의 형식으로 배우는 이들의 평가를 받는다. 전통적인

평가에서는 평가권한이 가르치는 이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가르치는 이들의 일방적인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싫다. 그렇다고 내놓고 싫다고 할 수는 없어 여러 구실을 가져다 붙인다. 가르치는 이들도 평가 받는 것이 싫은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렇게 일방 평가에서 쌍방향 평가로 바뀐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깔려있다. 배우는 이들의 학습권 신장, 잘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기관의 책무성(accountability) 증대가 주요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요소는 가르침 중심에서 배움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는 가르침의 목적에 대한 자각이 아닐까 싶다. 잘 가르치는 것보다 잘 배우게 하는 것이 보다 더 근원적인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잘 배웠음을 어떻게 아느냐로 관심이 이동하는데, 이것이 평가(assessment of learning)이다. 그리고 평가 또한 잘 배우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잘 배우게 하는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평가결과가 잘 가르치는 데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잘 배우게 하는 가르침(teaching for learning)이다. 이렇게 가르침의 근원적인 목적인 배움에 가까이 갈수록 평가는 중요해진다. 문제는 그렇게 중요할수록 배우는 이들에게나 가르치는 이들 모두에게 평가는 싫어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평가는 가능한 한 자주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assess의 어원인 sit beside처럼.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평가하기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 때문에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성도 그럴 만한 가치도 없다. 그러니 무엇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좋은가? 평가할 내용을 정했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수준과 형식의 답을 요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들은 전적으로 가르치는 이들의

몫으로 남아 있어서 그들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진다. 평가결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조차도 결과만 알고 하지 평가내용과 과정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당연히 평가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는 객관적 타당성과 공정성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배우는 이들의 대다수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공부한다. 실력을 쌓는 것은 뒷전, 좋은 성적에만 매달린다. 평가는 싫어하지만 좋은 평가는 받아야 한다. 평가는 주관적이고 그래서 모호하기 짝이 없건만, 그리고 평가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없건만, 객관적 타당성과 공정성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성적은 잘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평가는 배우는 이들을 학습의 장으로 몰아가는(?) 데에 있어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다. 그리고 그렇게 불완전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무엇을 얼마나 어느 수준으로 배웠는지, 무엇이 부족하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등을 알려주는 유일한 도구이다. 이처럼 가르침의 근원적인 목적인 배움에 가까이 갈수록 평가는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면 올바른 교육 목표의 설정과 그 목표 달성 정도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도구를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교육목표는 공개적이어야 하고 평가의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그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로 제시하여야 평가결과뿐 아니라 그 의미까지 파악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많은 가르치는 이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것 현실인 것 같다. 그렇게 평가는 싫어함과 모호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운명인가 보다.

고수들의 건강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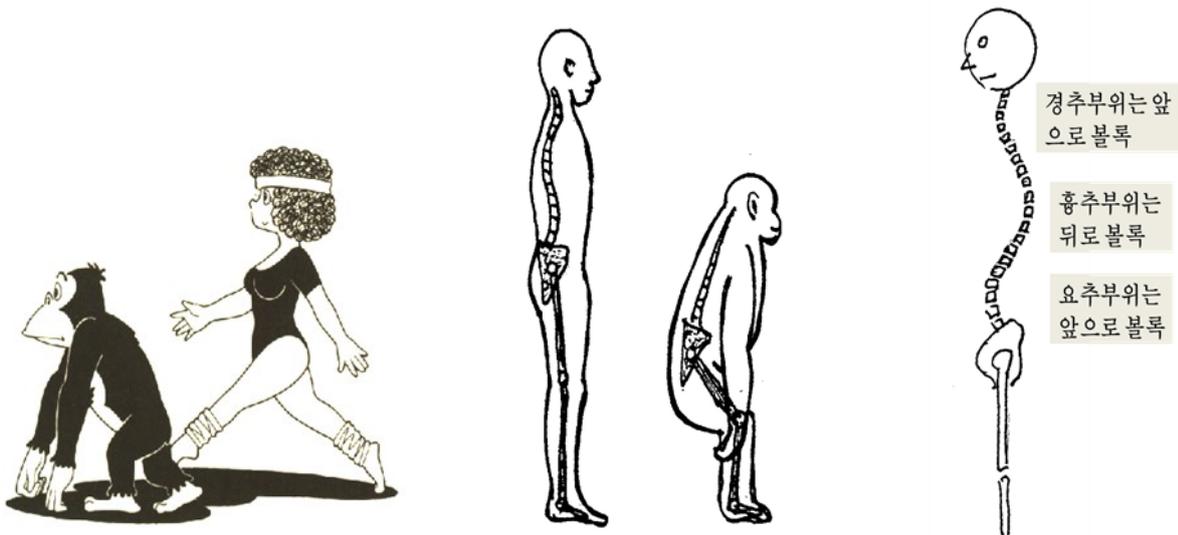
## 인간의 숙명 - 허리 디스크 트러블

신경외과학교실 조 기 흥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생 살면서 허리가 아파서 한 두 번 고생하는 것은 다반사이다.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허리 디스크를 늙도록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이 허리 디스크의 고장으로 고통을 받는 동물은 인간 밖에 없다. 왜 인간에게만 허리 디스크의 트러블이 발생하는 것인가? 물론 양 다리로 서서 직립하여 살기 때문이라는 것은 일반인도 다 아는 상식이 되었다. 옳은 말이다. 네발로 다니는 동물과 달리 두발로 직립하는 것이 훨씬 편한 동물은 인간 밖에 없다. 유인원도 급하면 네발로 뛰니까.

갓난 아이도 생후 7-8 개월만 지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뿔 잡고서라도 일어서려고 한다. 아니 무릎을 일자로 펴서 일어나려고 한다. 즉 무릎이 일자로 완전히 펴지는 동물은 인간 밖에 없고 척추의 S-자 곡선을 갖는 동물도 인간 밖에 없다.



직립으로 두 손이 자유로워졌으나 몸에 오는 하중과 충격이 허리에 주로 부담을 주게 되어 허리 디스크가 망가지게 된다. 그래서 요통이 심하게 온 환자분은 아예 네발로 엉금엉금 기거나 위 그림의 유인원 같은 자세로 무릎과 등을 구부리고 걸어 온다.

그렇다면 허리에 부담을 덜 주려면 무릎을 구부리는 것이 좋다는 원칙 하나를 세울 수 있다. 좀더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무릎을 구부려 허리부위 근육의 긴장을 늦추고 허리 척추의 전만곡(앞으로 볼록한 요추의 곡선)을 줄이는 것이 좋다. 이 원칙과 더불어 근육이나 인대를 움직이지 않고 고정하고 있으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도 안다면 요통예방을 위한 자세나 행동에 응용하면 된다. 손드는 벌을 줄 때 움직이지 않아야 벌이 되듯이 허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허리가 아픈 것은 당연하다.

**무릎은 굽히고 몸을 자주 움직이고 자세를 자주 바꾼다!**



# 아주대학교 교수회

전화: 031)219-2240  
팩스: 031)219-1608  
전자 메일: juok@ajou.ac.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전동 산5번지 아주대학교 울곡관 263호

허리가 약하다고 생각되면 항상 명심해야 할 말이다.

잠을 잘 때도 옆으로 누워 자면 좋다(무릎이 저절로 구부러지니까). 반듯이 누우려면 무릎 밑에 이불이나 큰 베개를 깐다(무릎이 구부러지게). 엎드려 자는 것은 무릎이 퍼져 요추의 전만곡(앞으로 볼록)이 더 심해져 좋지 않다. 의자에 앉는 자세도 좋은 자세가 있으나 좋은 자세를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장시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할머니들이 교회에서 한 시간씩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 몸을 앞뒤로 흔들기 때문이다. 가만히 앉아 있는 자세는 일어서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보다 허리에 부담이 더 크다. 서서도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것은 허리에 부담이 되므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좋다. 조금씩 움직인다는 것은 무릎을 한 다리씩 번갈아 구부리고 체중이나 충격을 분산시켜 허리로 오는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서서 작업을 해야 하거나 세수를 할 때에도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거나 허리를 자주 움직여 주고 발판을 준비하여 번갈아 가며 발을 올려 무릎이 구부러지게 하는 것이 좋다. 스포츠를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기 전에 허리나 몸을 준비시키는 것(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이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행동을 천천히 하고 근육으로 하여금 준비가 되도록 여유를 주어야 한다. 물건을 들 때는 완전히 무릎을 굽혀 앉아서 몸통에 팔을 붙이고 들어야 한다. 무릎을 펴고 몸을 구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허리를 강하게 만들자!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허리자체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디스크가 이미 고장이 났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원상복귀는 힘들다. 그러나 방법이 없지는 않다. 기둥에 금이 가고 약해졌어도 사방의 벽이 튼튼하다면 집은 잘 버틸 수 있듯이 디스크가 좋지 않더라도 허리를 지지하는 근육이 강하다면 충분히 강건하게 활동할 수 있다. 우선 가장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은 하루 한 시간 이상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다. 승강기는 내려올 때나 타고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허리를 지지해 주는 핵심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동법의 숙지가 필요하며 제한된 지면상 어렵기도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안되므로 운동치료실에서 운동치료사의 지도를 받을 것을 권한다. 우리 대학 병원에도 있으므로 외래로 내원하여 의사에게 운동처방을 받으면 된다. 실비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허리의 핵심 근육이란 아래복근, 요배근,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등이며 이런 근육의 전문적 강화가 허리 강화에 필수이다.

디스크 고장은 20대부터 시작되는 너무나도 흔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제거해야 하는 암과 같은 적군이 아니고 잘 관리하며 같이 지내야 하는 부상당한 아군이다.

편집위원회 : 김상배 (편집책임),  
강충권, 구형건, 노명우, 윤호섭, 이재호